현장 불법 체류 외국인 13.4만명으로 추정

- 90% 가 수도권에 분포하는 듯, 합법적 산업연수생은 6,000명 미만 -

건설 현장에 존재하는 외국 인력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합법적인 산업연수생과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입국했으나 기간과 장소를 벗어난 협의의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비자도 없이 입국한 밀입국자까지 포함(불법 체류자로 통칭)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능한 한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이후에 관련 제도를 설계하거나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하는 데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합법적인 외국 인력은 5,723명

건설 현장의 외국 인력 중 산업연수생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불법 체류자의 규모이다. 이것은 현장 조사를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다. 현장의 실상을 파악하려면 현장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건설 현장의 노동력 통계는 그 실상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의 외국 인력 통계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서는 건설 현장의 외국 인력 규모, 특히 불법 체류자의 규모에 대해 가능한 한 현장의 실상을 담아보고자 한다.

다양한 경로로 현장 실상 가늠해야

건설 현장의 합법적인 외국 인력은 산업연수생뿐이다. 대한건설협회의 외국인산업연수협력단에 의하면 2003년 10월 말 현재 건설 현장에서 활동 중인 산업연수생 수는 5,723명이다. 국적은 대개 태국, 중국, 필리핀 등이며,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도 일부 존재한다.

추방되기 전 국내 건설 현장에는 모두 14만 명의 외국인 기능공이 체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합법적인 인력은 6,000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 현장의 불법 체류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장의 실상을 가늠해보아야 한다. 공식적인 경로 또는 대규모의 설문 조사에 의할 경우 '불법'이라는 낙인 때문에 불법 체류자의 존재를 숨기거나 축소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십장을 따라온 불법 체류자의 규모를 알 수 없어 현장의 관리자가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외국인 근로자, 건설 현장의 관리자, 조선족 관련 단체, 건설연맹 등 다양한 관련 당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기초하여 불법 체류자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것은 2003년 3 5월 각 당사자들과의 면담 결과에 나타난 불법 체류자의 지역별, 공종별, 직종별, 규모별 분포를 활용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2002년 7월에 자진 신고하지 아니한 밀입국자 규모도 포함된다. 조선족 관련자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족 중 밀입국자가 약 15 20 %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이제 건설 현장의 불법 체류자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위에서 도출한 지역별 및 직종별 분포를 이용하여 몇 가지 가정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별로는 90% 의 불법 체류자가 서울 및 수도권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나머지 10% 가 수도권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산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공종별로는 건축 공사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셋째, 직종별로는 형틀 목공, 철근 콘크리트 등 골조 공사 관련 직종에서 전체 건설 기능 인력의 70% 를 차지하며, 그 외의 직종에서는 약 10% 를 차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불법 체류자의 90% 가 수도권에

이러한 가정하에서 건설 현장의 불법 체류자 규모를 추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 및 수도권에 존재하는 내국인 건설 기능 인력 규모를 산출한다. 대개 내국인 건설 기능 인력은 서울에 22.5%, 경기에 21.0 %, 인천에 5.3 % 등 수도권 지역에 전체의 약 50 % 정도가 분포한다. 통계청의 경제 활동 인구 조사에 나타난 2003년 3월 현재 전체 내국인 건설 기능 인력은 약 135만 1,000명인데 이들의 50% 인 약 67만 6,000명이 수도권 지역에 분포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서울 및 수도권에 존재하는 내국인 건설 기능 인력 중 건축 공사에 종사하는 인력을 가려내야 한다. 토목 공사에는 불법 체류자가 없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대한건설협회에 의하면 2003년 상반기의 건설 투자는 약 35조원이며, 그 중 건축 투자가 약 20조원이고 토목 투자가 약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건축 투자 대 토목 투자가 57.3 : 42.7이다. 여기에 고용계수를 감안하여 양자의 근로자 수를 나누어볼 수 있다. 2001년 10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1998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 연관효과」에 의하면 건축과 토목의 고용계수는 14.9로 동일하다.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에 존재하는 내국인 건설 기능 인력을 건축과 토목 공종의 투자 비율로 배분하면 각 공종에 종사하는 내국인 건설 기능 인력 규모를 추산할 수 있다. 계산해보면 약 38만 7,000명이 서울 및 수도권의 건축 공종 현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3만 4,000명으로 추정

셋째, 직종별로 전체 기능 인력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환산해야 한다. 직종별로는 대규모 현장의 형틀 목공과 철근 및 콘크리트 직종에서는 70 %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소규모 공사에는 그 비중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평균적으로 70 %를 적용한다. 한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현장 관리자들의 응답을 종합해보면 다른 직종에도 10 15 %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 공종 중에서 형틀 목공과 철근 및 콘크리트 이외의 직종에 존재하는 불법 체류자의 비중은 10% 로 가정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형틀 목공과 철근 및 콘크리트 직종의 근로자 수는 전체 건설 기능 인력의 약 23% 를 차지한다. 그 이외의 직종에는 77% 의 건설 기능 인력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보를 종합하면 서울 및 수도권의 건축 공종에 존재하는 전체 건설 기능 인력 중 평균적으로 약 23.8% 가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의 건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건설 기능 인력 중 내국인은 약 76.2% 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위에서 도출한 지역별 및 직종별 분포를 이용하여 건설 현장의 불법 체류자 수를 추정할 수 있다. 먼저, 서울 및 수도권의 건축 공사 현장에 존재하는 불법 체류자 수는 약 12만 1,000명으로 추정된다. 이 규모가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전체 불법 체류자 수의 90% 를 차지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결국 전국의 건설 현장에 존재하는 불법 체류자 수는 약 13만 4,000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요컨대 건설 현장에는 합법적인 외국 인력 약 6,000명과 불법적인 외국 인력 약 13만 4,000명 등 모두 14만명 정도의 외국 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것이 대표성이 있는 공식 통계는 아니나 2002년 자진 신고에 기초한 노동부나 법무부의 통계에 비해 훨씬 더 현장의 실상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외국 인력 관련 제도나 도입 규모를 설계할 때 반드시 이러한 내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CJ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gbshim@cerik.re.kr